

尹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천명은 최소 확충 규모”

윤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27년 간 정원 1명도 못 늘려 저출산 정책 철저히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암 환자 수술 등이 연기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음모론’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증원 규모 축소 타협론’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으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가 역량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양육·교육·주거 불안을 언급하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생 토론회를 이어온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이낙연 합당 철회 “국민에 사과”

“할 말이 많지만 ...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오늘날은 앞으로의 호연장담보다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며 “할 말이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동대표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여러 구성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고 말하며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승천 의원의 원칙과상성과의 통합 유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최고위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 나를 포함해 여러 세력이 다소 민기 힘들어하는 눈치”라며 “금일중 세력 대표자가 모여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 5인 이상 기준을 충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선보조금과 관련해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상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직 기구나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통합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지만 선거 주도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준석 공동대표에 선거 지휘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정면충돌로 번지며 와해됐다. /연합뉴스

국힘, 23~24일 수도권 등 20곳 총선 후보 경선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4·10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해 지역구 20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 6곳(동대문갑, 성북갑, 성북을, 양천갑, 양천을, 금천), 인천 2곳(남동을, 부평갑), 경기 3곳(의정부을, 광주을, 여주·양평), 충북 5곳(청주 상당,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3곳(보령·서천, 아산을, 홍성·예산), 제주 1곳(서귀포) 등 20곳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대상으로 발표한 예비 후보는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면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선은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후보자별 감산과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원과 일반 유권자 등 두 조사의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이며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이다.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은 21~24일이며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불이행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해야”

홍익표 원내대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녀 양육자에게 쥐야 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

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 (가칭)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에 대해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담금 감면(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정량표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